

文 “위기에 머뭇거릴 여유 없어… 정책 조속 추진을”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3차 추경, 방역체계 강화 등 속도를 질병관리청 승격, 입법·과제 최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각종 정책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 위기에 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이 겪는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도 시간표를 앞당겨 조기에 실행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당부한 정책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뿐 아니다. ▲방역 보건 체계 강화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한국판 뉴딜 정책의 과감한 추진 ▲단계적인 발전을 통한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 등 정책도 정부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에 방역 보건 체계 강화를 주문하면서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며 “올가을 또는 겨울에 찾아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관련해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과감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과정에 대한 당부도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창의적 사고와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정책과 관련한 섬세한 주문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국난 극복에 필요한 각종 법안들의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 국난 극복의 의지를 모으고 있는 국민들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현화하는 전혜숙 위원장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노동현장 안전특별위원장 이 12일 오전 경기 이천시 창전동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합동분향소에서 현화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더시민 합당… 177석 거대 여당 탄생

오늘 수임기관 합동회의서 마무리 중앙선관위에 15일 합당신고 예정

21대 국회에 ‘177석’ 거대 여당이 생긴다. 더불어민주당(163석)과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당(14석)이 13일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면서다.

민주당은 12일 중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에 필요한 수임기관으로 당 최고위원회를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열린 제3차 당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들은 온라인 투표로 수임기관을 선정했다.

온라인 투표 결과, 총 657명의 중앙위원 중 497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97.7%(486명)가 찬성해 수임기관으로 당 최고위원회가 지정됐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7~8일 권리당원 78만9868명을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의견에 대해 투표했다. 투표에 권리당원 17만7933명이 참여했고,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은 84.1%(14만9617명)가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15.1%(2만8316명)이었다.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은 13일 민주당과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마무리될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의에서 이석현 중앙위원회 의장(가운데)이 개의의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정이다. 합당은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흡수 통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당선인이 민주당에 소속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신고는 15일 할 예정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한 것은 미래통합당의 반칙과 편법에 대응하고 소수정파 시민들의 국회 진출을 돕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선거 후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은 대국민 약속이었다. 오늘 중앙위의결과 내일(13일) (양당 수임기관) 합동 회의를 통해 양당 통

합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시민당도 같은 날 용혜인·조정훈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한 제명을 확정했다. 이들은 제명에 따라 출신 정당으로 복귀하게 된다. 용 당선인은 기본소득당, 조 당선인은 시대전환이 각각 출신 정당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용혜인·조정훈 당선인의 제명이 확정됐다. 두 분이 합당 결의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셨고 재심 포기각서도 내셨기에 재심 기간 없이 오늘 최고위에서 바로 확정 의결했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신규등록 반려견 80만 마리… 5배 급증

농림축산검역본부, 2019 실태조사 총 13만 마리 구조… 20%는 안락사

지난해 신규로 등록된 반려견이 전년 대비 5배 가까이 많아졌고 동물 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종사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려진 뒤 구조된 동물도 13만여마리로 늘었고 구조된 5마리 중 1마리는 안락사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보호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19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복지 실태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79만 7081마리로 전년 대비 445.6% 증가했고, 지난해 등록된 반려견 총 숫자는 209만 2163마리로 조사됐다.

반려동물등록제는 2008년 시범 도입 이후 2014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으

며 신규 등록 마리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지역별로 경기도 27.4%, 서울 15.7%, 인천 7.5% 순으로 등록 증가율이 높다.

동물 등록번호는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외장형), 등록인식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반려견 소유자의 44.3%가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를 선택했다.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는 대행기관은 총 4161개소로 전년보다 19% 증가했고, 동물병원이 80.8%, 동물판매업소가 15.3%이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과 종사자도 증가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8개 업종 총 1만7155개소로 전년 대비 27.2% 늘었고, 종사자는 약 2만2555명으로 35.8% 증가했다.

반려동물 관련 업종은 기존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4개 업종에서 2018년부터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4개가 추가됐다.

업종별로는 동물미용업이 37%로 가장 많고, 동물판매업 24.4%, 동물위탁관리업 22.2% 순이다. 동물미용업 종사자는 7750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용수 기자 hys@

안동·고성 산불진화, 부처협업 대응 성과

산림청 ‘신 산불 종합대책’ 적용·분석

산림청은 지난달 24일 안동 산불에 이어 지난 1일 고성 산불을 성공적으로 진화한 것은 부처 간 협업 강화와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밀한 대응에 따른 것이었다고 분석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4월 강원 동해안 재난성 대형산불 발생 이

후 수립한 ‘2020 신(New) 산불 종합대책’을 올해 4~5월 발생한 안동·고성 산불에 적용한 결과를 분석해 교훈과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동 산불은 대형산불로 인구 밀집지역인 도심에서 발생했고 강풍으로 재난성 산불로 확대될 수 있었으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성과를 냈다. 이어 발생한 고성 산불은 지난해 고성·속초 산불처럼 양간지풍지역에서 오후

8시 전후 발생했고, 바람도 초속 20m 이상인 상황에서 단 1명의 인명피해 없이 주불을 12시간 만에 진화했고 재산피해도 최소화하는데 성공했다.

산림청은 안동·고성 산불 진화의 핵심적인 성공요인으로 ▲ 부처간 협업 강화 ▲ 과학기술에 기반한 스마트한 산불예방과 산불진화 체계 구축 ▲ 치밀한 공중·지상 진화작전 수립 ▲ 지상 진화 인력동원 및 배치의 효율화 ▲ 잔불정리의 효율적 추진 ▲ 공중진화대, 산불특수진화대 지상진화인력의 활약 등 7가지를 꼽았다. /한용수 기자